

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속도… “불법행위 단속 특사경 도입”

불법·부당행위 근절 협의회 개최
제재 기반 강화차원 5대 법안 추진
“현장 불감증 만연… 노사 노력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차원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건설사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하기로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다. 이 가운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

을 노동조합·건설사 불법 행위 단속에도 투입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간다.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 차원에서 공공 공사 중심의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이번 후속 대책 외에 건설 현장에서 법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는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입장차도 확인됐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건설업체 대표 측은 ‘불법 행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주문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측에서 불법 행위가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적 변화를 보인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직도 현장에서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 참석자들은 현장 불법 행위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고,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가 걱정하는 부분은 엄정한 수사로 중간에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고, 필요하면 현행 법까지 체포해 나가서 단속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은 오랜 기간 쌓인 불법과 비정상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상적인 건설 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은 수수만 하면 돈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틀어진 인식으로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부실시공 등 문제에 대해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을 안 하는 팀·반장, 자기 소속 노조원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 현장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野, 25일 국회 본회의 합의… 전세특별법 처리 속도낸다

원내대표 회동… 임시국회 일정 조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합의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범위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 등 현안들이다.

이들 현안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

한 사항들이다. 그간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수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 위원회에서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것을 마련하는데, 아직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도 “세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야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16일 예정된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취

지로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5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해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여야는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 저와 생 각이 같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김기현, 설화논란 공개사과… “엄격한 도덕 기준 지켜갈 것”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징계

당원권 정지 1년·3개월 처분
당사자들 수용… 내홍 일단락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을 징계하면서 ‘설화’로 인한 물의는 일단락시켰다. 당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한 악재가 사라지면서, 김기현 지도부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김기현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설화’로 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공개사과했다. 이어 엄격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덕 기준을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수용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징계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지지해 준 당원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도 사과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성공, 대한민국 번영,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제2 창군’ 수준 국방혁신 필요”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국방혁신의 목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강군으로 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구하는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